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지만 광주·전남지역은 대설특보로 많은 눈이 내렸다. 4일 영광 법성포 포구 주변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번 주 내내 강추위 최대 20cm 눈 내린다

광주·전남에 이번 주 내내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오후 기준 광주와 나주·담양 등 전남 15개 지역에 대설특보를 발효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최심신적설량(새롭게 쌓인 눈이 가장 두껍게 쌓였을 때의 깊이)은 장성 상무대 15.9cm, 광주 광산 11.7cm, 함평 11.5cm, 영암 시종 10.8cm, 목포 10.5cm, 영광 8.0cm, 진도 7.8cm, 나주 7.5cm 등이다.

눈길 낙상과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3일부터 4일 오후까지 광주소방에는 총 17건(낙상 9건, 교통사고 3건, 안전조치 5건)의 대설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소방에는 총 9건(교통사고 3건, 낙상 1건, 안전조치 5건)이 접수됐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4일 오전 10시께 장흥군 유치면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됐다. 운전자는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거센 눈바람으로 인해 바다길과 경사가 급한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다.

전남 도서 지역을 오가는 47개 항로 여객선 59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구례 노고단, 무안 청수길, 진도 두목재·솔비치, 목포 다부랫길·유달산일주도로, 함평 국군병원 인근 등 경사가 급한 도로 7개 구간의 차량 통행이 막혔다. 무등산과 지리산 전남, 월출산 국립공원, 내장백암 탐방로도 통제됐다.

기상청은 6일 새벽까지 전남북서부를 중심으로 5~20cm 많은 눈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와 전남 남서부에는 5~15cm, 전남동부에는 3~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전남 '이재명표 정책' 시험무대 되나

지자체들 기본소득·지역화폐 정책 등 추진...민주당도 적극 지원
재정자립도 10% 미만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 집행 우려 목소리도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지역화폐 등의 정책을 앞다퉀 추진하면서 호남이 '이재명표 정책 시험무대'가 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커지면서 이 대표의 공약에 대한 '실현 성적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호남에서의 이 대표 정책 실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정책과 공약이 현실 행정에서도 호평을 받는다면 대선 준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광주·전남 지자체장들도 당 대표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입하

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자치단체들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무리한 재정 집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의 정책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추진하는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늘고 있고, 이를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사단법인 글로벌정책연구소는 기본소득 모델 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본소득 모델 도시로서의 광주'를 주제로 하는 개원 기념식과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9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구원은 행사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발

을 위한 각계 현장 전문가 영입, 기본소득 모델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상설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남도는 풍력·태양광 발전을 기반으로 도민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의 지역화폐인 '북구사랑상품권' 조례안도 최근 구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 북구의회는 '광주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해당 조례는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구는 조만간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행정안전부에 상품권 발행신고를 할 계획이다. 북구는 소요 예산 100%를 구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강조해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의 정책을 도입하는 광주·전남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것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가 많고 예산 부담이 적다는 이점 등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16 재선거가 치러진 영광에서는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공약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영광군은 인구는 적은 대신, 한빛원전 지역자원 시설세 3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어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지자체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 등이 영광을 직접 찾아 기본소득 적용 가능성 등을 타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표 정책'이 호남에서 각광 받고 있는 것은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색이기에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갈등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치적 배경도 깔려 있다.

반면 예산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천을 위한 '잘 보이기식 당 대표 정책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어려워진 국가 재정 여파로 지자체 살림도 덩달아 힘들어지고 있는데 자치구 자체적으로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홍장원 "尹,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했다" 증언

현재 5차 변론기일

군·국가정보원 핵심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쟁점에 대해 엇갈린 증언을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며 기존 진술을 유지했으나, 군간부들은 연관성을 부인하거나

증언을 회피했다.

현재 대심판정에서 4일 오후 2시 5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했다.

이날 국회측 증인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

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의 핵심 지휘부다.

홍 전 차장은 국회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 핵심 지휘관들은 나란히 쟁점에 대해 증언과 진술을 거부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밝혔지만,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입을 굳게 닫았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측 법률대리인단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는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는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여 전 사령관도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진술을 거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눈길 안전 책임지는 광산구 '마을 제설단' ▶6면

광주FC 이적생 권성윤 "우승 노리겠다" ▶18면

굿모닝 예향 - '남도 관광' 무안의 볼거리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